



## 원유가 협상 그 이후 진단과 대책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관한 '원유가협상 그 이후 진단과 대책마련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와 생산자, 유가공업계, 낙농진흥회 등 대표자들이 참석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열렸지만 주체별 입장차는 여실히 드러났다. 쟁점사항은 협동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와 통계청 우유생산비의 신뢰성 문제, 낙농산업 제도 개선방안(원유기본가격연동제), 생산자 중심의 유가공공장 건립 등이었다. 낙농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와 각 이해주체들의 최선의 절충점 도출이 시급하다.

## 주요 발언 내용

### 낙농산업 제도개선 관련



전국 단위 계획생산제 도입, 원유수급조절기구 설치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낙농생산성 향상 및 원유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원유 기본가격 연동제가 필요하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



장관 지시로 낙농진흥회 내에 생산·유통·가공분과를 원유가격조정위원회, 유통구조개선위원회, 낙농제도개선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제도개선위원회는 낙농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낙농의 특성상 입장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수현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장)

연동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된 부분이며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 회장)



연동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의 객관성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원유가 인상 후 10월 16일 유가공협회 측에서 유대인상지급유보 통보를 해왔다. 단순히 기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 유업체와 농가는 상생의 구도로 가야 한다. 연간 총량제 도입도 필요하고 가공유 지원사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진흥법을 개정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책임지고 낙농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승호 협회장)

###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우유 및 유제품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협동조합 주도의 우유시장 체제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력 강화 즉, 싱글데



## 현장스케치

스크(single desk,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낙농진흥회는 나름대로 역할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집유일원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

전국단위 수급관리체계는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고 있어 의견 합일이 필요하다. 정부의 집유일원화 의지는 있으며 정부를 믿고 따라오면 노력하겠다.

(노수현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장)



집유일원화는 해외의 경우를 보아도 각 브랜드를 내세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유가 부족할 때는 생산자 측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있어 유가공업체가 반대하는 것이다. 쿼터의 악순환은 수급조절이 안되어서 그러하다. 쿼터가 거래에 관계된 제3자에 의해 조절되는 것은 문제이다. 합리적 쿼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전국단위로 봤을 때 잉여·부족시의 문제는 누가 변상하겠는가.

(김시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축산업의 효시인 낙농이 보호받기 위해선 단일쿼터제가 필요하고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영웅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축산지원부장)

시유가 국한되어 있는 국내 상황을 볼 때 농가 쿼터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위원회 중심의 집유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승호 협회장)



전국단위수급조절제가 필요하다. 집유일원화는 현행 법체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입·탈퇴의 부작용이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 생산자 의지 합일이 필요하다. 집유일원화는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이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된다.

(진흥회 남유농가 이경웅)



일본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중심이지만 다른 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진흥회는 합의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나 욕을 먹는 실정이다. 집유는 25%밖에 못하지만 의사결정권은 있다고 본다. 집유일원화 문제는 일본과 같이 협동조합이 문을 열어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집유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집유일원화는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제품 낙농진흥회 회장)

### 생산자 중심의 유가공 공장 건립



이번 원유가 협상 과정에서도 역시 진통을 겪었다. 거래교섭력에 있어 생산자는 여전히 약자의 위치이다. 협동조합 중심의 유가공공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협의 경우 하나로마트 등 전국단위의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또 각 지역조합에서 학교급식에 있어 역할을 해주면 판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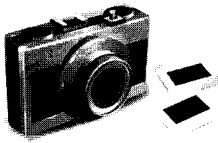
이번 유대협상도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공장 가동률이 40% 웃도는데 유가공공장을 이 시점에 세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운영자금도 예산과는 달리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목우촌 사례를 보아도 시유 시장쟁탈전이 가속화되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

(김시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설비가 남아도는 입장에서 또다른 유가공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운영자금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법체계로도 집유일원화는 가능하며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이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진흥회 납유농가 이경용)

### 기타 발언

학교우유급식도 외국은 플라스틱 병으로 포장하여 수시로 음용이 가능하도록



## 현장스케치

만드는데, 우리는 종이팩으로 포장하여 일시적 응용만 가능하도록 하는 포장 문제가 있다. 음용우유 소비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유의 표시기준 개선도 필요하다. 외국은 과일이 들어가면 '유음료'라 칭하나 우리는 '딸기 우유'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수출 측면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해야한다.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



우리 조합만 봐도 후계자가 정해진 농가가 10% 비율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인 만큼 정부는 후계자 육성에 적극 신경써주길 바란다.

(신관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

자조금사업은 관련업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지 않나. 유업체가 자조금사업 등한시 하는 것은 안타깝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창출되는 이익도 자조금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업체 판매수익금도 자조금 사업에 쓰여져야한다. (이승호 협회장)



1년 거치 1년 상환 1% 사료보조금 제도가 지금은 일반 대출이 되어 고스란히 농가 빚이 된 것을 정부는 신경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매일 납유농가 김기주)



낙농가들에게 요즘 낙농이 어떠시냐 물었더니 불안하다고 한다.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후계자 양성이 안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다. 소득보전제 마련도 시급하다.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낙농산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김태섭 부회장) ㉠

(취재 및 정리 : 이정훈)